

월요광장



박 천 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개발연구실장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는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클린턴의 선거 전략으로 유명해진 말이다. 경제여건이 다른 어떤 이슈보다 중요하며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전략상 경제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당시 불황인 경제상황으로 보아 ‘현직 대통령에게 투표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며, 새로운 인물인 자신에게 투표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호소이기도 하다.

잘 알고 있듯이 클린턴의 전략은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아칸소 주지사 출신 정치 신인으로 초기의 불리한 전국적인 인지도를 극복하고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

일자리의 봄은 언제 오나

으며 4년 후 재선에도 성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에서 단순한 표어로 이슈 프레임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경제상황이 정치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국민에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경제 흐름이라기보다 자신의 ‘일자리’이다. 경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되거나 일자리에선 얻는 수입이 감소한다면, 경기가 좋은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경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국민 모두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선거철마다 모든 후보자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강력하게 공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자리에서 수행하는 ‘일’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소득을 얻는 것은 물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받는다. 다시 말해 일은 생계의 기반이 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에서 부응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이며,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는 지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일이 없다면 가계 유지는 물론 정상적인 사

회생활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시할 것 같은데, 뜻밖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일을 경시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보통 사람들은 복권을 사서 황재를 하거나 소유한 땅값이 크게 오르거나 부모가 축적한 재산이 있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마음대로 돈을 쓰며 살 수 있는 것을 매우 부러워하며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일 없다’라는 말은 문제가 없어서 매우 좋은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을 굴레로만 여기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직무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든지 비이성적인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일이 사람을 속박하는 굴레로 작용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수단으로만 일을 보게 되면 일이 가지는 굴레의 측면이 커진다. 가난한 사람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에는 굴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은 성취하는 보람이 있고 일을 통해 권한과 지위를 누리는 측면도 크다. 청소하는 사람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깨끗해진 청소 이후를 보는 즐거움은 자기의 연구결과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을 때, 연구원들이 느끼는 기분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게다.

또한, 일은 그 일을 통하여 배우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아무리 청소를 잘하는 법을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도 실제로 만나는 현실은 다를 것이므로, 청소를 많이 해본 사람이 청소를 더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청소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선 청소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가 소득 이외의 측면에서 일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근대 산업사회로 진입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일 자체를 구하기가 너무나 곤란한 실정이며, 특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바로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계절의 봄은 또 다시 우리 곁에 오는데, 일자리의 봄은 언제나 오게 되는가?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기대를 걸어본다.

기고

우체국과 창조경제에 대한 단상



김 병 수
전남지방우정청장

봄이다. 겨울 철새들이 북쪽으로 날개를 헤치고 산기슭의 잔설도 떠날 체비에 팝팝을 흘리는 모습이다. 들녘 또한 시시각각 회색 옷을 벗고 푸릇푸릇 새 단장에 꽃소식이 다. 이렇듯 봄은 만물을 새롭게 깨우느라 부산하고 설렌다. 요즘의 봄은 오는 듯 떠나가니 봄을 제대로 느끼는 데에도 남다른 감성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올해의 봄은 창조, 창조경제를 핵심국경가치의 하나로 삼는 새 정부 출범이 있어 더욱 그렇다. 어쩌면 창조, 창조경제가 이 시대만큼 절박하게 다가오는 때도 없지 않나 싶다. 우선 세계경제발전 흐름이 물질적 자본보다는 정보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창조경제는 새로운 기회이며, 나아가 산업화-민주화에 있어 서구의 모범적 수확상이었던 우리가 서구를 넘어 21세기 세계사의 뚜렷한 주인공이 되고자 함에 있어 마땅한 도전이다. 현실적으

로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거대 인적 물적 자본을 보유한 중국 등의 추격을 뿌리치고 경제부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에 대한 태도와 해법의 큰 축을 과학과 문화에 두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과학에 근거하는 시스템과 품격있는 문화에 바탕하는 사고와 행동이야말로 창조의 원천이라 하겠다. 한편 창조, 창조경제는 결코 특정기술이나 특정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과거 경험상 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친 혁신과 창조가 모색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폭과 깊이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특히 IT 정보통신기술의 가치를 새롭게 높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 창조는 IT전문가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하겠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IT분야에 상당한 국가적 자원을 투입하였고, 그 성과 또한 컸음에도 아직도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에 IT기술을 접목하는 수준에서 정보화가 이루어진 까닭이 없지 않다. 세계최고인 독일 SAP사의 기업용 자산관리(ERP) 소프트웨어는 세계최고수준인 독일기업경영시스템의 IT버전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 만큼 창조경제정책은 일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기존 사회경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선행적이며 구조적 혁신을 추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견이다.

아울러, 창입국가 이스라엘의 비결이 뻗뻗함 등으로 해석되는 ‘후즈와 문화’에서 나온다는 지적에서 보듯이, 종래 우리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식의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치열하게 논쟁될 수 있는 조직문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책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최근 남도에도 창조에 대한 논의가 뚜렷하다. 지역언론에 실리는 남도의 미래에 관한 저명인사들의 인터뷰는 창조가 키워드다. 남도의 역사 문화적 지력을 이 시대의 가치와 기술에 맞추어 어떻게 재창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가득하다. 필자가 있는 우정청 맞은편으로 광주시청의 캐치프레이즈 ‘행복한 창조도시’가 보인다. 전남도의 캐치프레이즈는 ‘녹색의 땅’이다. 매일 시청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창조란 말에 설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늘 고민하게 된다. 올해의 봄이 남도의 모든 지적 문화적 자산을 창조라는 키워드에 총체적으로 융해하여 남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의 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소속을 바꾸는 우체국도 창조경제에 고민이 크다. 남도우체국은 지난해부터 월례초회를 상상력 대화로 바꾸고, 과학과 예술을 경영의 양대 축으로 삼아 ‘예향남도 100만 편지쓰기’ 등 늘 새롭게 우체국을 살펴보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신년 상상력대화시간에는 창조활동의 5대 핵심가치로

영감, 상상, 소통, 공감, 도전을 설정하고,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질문 자체를 더 키우는 노력 등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이나 노인복지, 농산물 판로개척, 예술작품전시 등 사회경제인프라로서 우체국 자원의 활용 폭을 넓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앞으로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시각을 넘어 우체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서비스를 개발하고 협업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외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키워나가고자 한다.

봄을 맞아 남도우체국은 창조경제의 작은 실천이 펼쳐지고 있다. 요즘 남도우체국은 광주에는 “무등 봄 햇살에 더 빛나는 빛고을이여”, 올해 남도 최대행사인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순천에는 “갈대 봄 바람에 짙둥어 바람났네”, 바닷가 목포에는 “다도해 봄바람에 불리 숨어 파도 뽀뽀” 등 광주전남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봄맞이 글을 멋진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 소통이 강조되나 창조는 소통보다 훨씬 더 시공간의 맥락과 흐름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그런 만큼 뜻과 멋을 살려내는 영감과 상상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 새봄을 맞아 남도우체국이 남도의 새봄을 열고 싶다. 전통적인 친절과 성실을 넘어 뜻과 멋이 넘치는 창조의 공간이 되고 싶다. 봄은 오는 듯 떠나가니 서둘러 봄을 보시려거든 우체국으로 오시라. 그곳에 새봄의 새로운 영감과 상상이 있으려니.

문이 가져야 할 무게감 때문에 일상적인 표현으로 판결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들은 늘 고뇌에 빠진다.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법의 권위를 살릴 수 있는 판결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판사의 숙명인 것 같다.

끝으로 소개한 판결문을 쉽게 바꿔 쓴 예를 살펴보면 이 글을 마칠까 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 회유 끝에 받아낸 것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소지가 있다. 둘째, 자백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자백의 임의성에 다름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社說

전남 사회복지법인 비리 도를 넘었다

전남도내 사회복지법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법인 대표가 인건비를 횡령하는가 하면, 법인 자금으로 유흥주점에서 수백만 원을 쓰는 등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일탈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안의 한 요양원 시설장 A씨는 2008년 5월~2012년 11월 사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 16명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근무 인원을 조작한 뒤 337차례에 걸쳐 무려 4억 5200만 원을 횡령했다고 한다. A씨는 또 요양원의 공금 280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했다.

순천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C씨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530만 원을 결제하는 등 법인 자금 39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적발됐다. 무안의 노인복지센터 대표이사 B씨는 지난 2009년부터 친인척 등을 허위로 채용한 뒤 1억2500만

원을 착복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으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써야 할 공금을 가로채고, 유흥주점에서 제 돈인 양 평평 썼다니 그야말로 파렴치한이 아닐 수 없다. 요양시설 노인과 장애인들이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의 불·탈법행위가 아재오들의 일이 아니지만 형식 문제로 대두되는 건 제도가 허술하고, 관리·감독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 탓이다. 외부의 감독기능이 차단돼 있고, 법인만 설립해 놓으면 후원금과 지원금을 챙기는 데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거기에는 공익이사 제 도입 등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지자체 역시 탁상행정으로 일관해선 안 되며, 사법당국도 이들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위기의 문화재단 시민 재단으로 거듭나야

부적절한 직원 채용과 특정인의 전횡을 지적한 내부 문건 유출로 곤욕을 치른 광주문화재단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재단 대표와 사무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광주시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사무처장의 사표 수리로 정리됐지만 막중한 책무를 띤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문화도시 광주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4일 박선정 사무처장이 부적절한 직원 채용 등 재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낸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노성대 대표에 대해서는 임기가 남아 있고 조직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표를 반려했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문진위와 공연예술재단을 통합해 지난 2011년 출범했다. 문화예술인 지원과 시민에 대한 문화 향수권 확대, 문화기금 확충 등 ‘시민이 행복한 문화공동체 광주’를 목표로 의욕적인 출발을 했다. 시 출범기관으로 국비 등 169억 원의 사업

비로 각종 문화 공연과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부터 1년간 직원 채용 당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13명을 비공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또 박 사무처장이 최근 무기계약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탁받은 A씨 채용을 지시하는 등 관련 인사 규정을 어긴 채 총 6명을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광주의 문화마인드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재단의 일부 직원이 특권층 등 표류로 인해 재반 사업의 콘텐츠가 부실해지고 조직이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서야 하고 문화재단은 그런 광주의 문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다. 문화재단은 이제라도 모든 잡음을 씻고 시민의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출발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여기는 고요의 바다 기지.”(Trans-quillitatis base here) 올드린 비행사의 목소리가 전해지자 미항공우주국(NASA) 관제실은 환호성에 휩싸였다. 1969년 7월 20일 오후 4시 17분 34초,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 ‘이글’은 정확히 달표면 ‘고요의 바다’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그리고 착륙 6시간 후, 그 유명한 메시지가 달에서 지구로 전해졌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이 말은 TV를 지켜보던 전세계 5억여 명의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많은 이들에게 ‘우주 탐사의 꿈’을 심어줬다. 아폴로 계획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60년대 안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아폴로 11호의 성공 후 1972년 마지막 발사한 아폴로 17호까지 모두 6기가 달에 착

륙했고 12명의 우주비행사가 달을 밟았다. 그들이 달표면에 체류한 시간은 300시간, 가지고 돌아온 월석과 흙의 총량은 380kg이었다.

최근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아폴로 우주선의 엔진이 40여년만에 대서양에서 인양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인양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더 흥미롭다.

주인공은 인터넷 서점 아마존 최고경영자 제프 베조스다. 그는 민간인 탐사팀을 고용해 1년 동안 자비를 들여 수색작업을 했고, 마침내

“바닷속 신비한 세계를 찾아냈다. 이 엔진은 아폴로 계획이라는 약속에 복무했던 것으로, 그 뜨겁고 격렬했던 최후

를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환호했다. 지금까지 우주 개발은 국가의 영역이었다. 1969 ~ 1972년 아폴로 계획을 위해 일한 사람은 가장 많았을 때가 43만 명에 달했다. 어릴때 부터 꿈이었던 우주개발을 상상해온 한 사람의 꿈이 이뤄낸 성과가 놀랍고, 또 부럽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법조칼럼

소통과 권위 사이 ‘판결문 고민’



김 남 일
광주지방법원 민사 23단독 판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름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필자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판결문을 접했을 때의 일이다. 오래전 일이라 판결의 내용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판결이 주었던 인상이 무척 강렬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그 판결은 판결문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 읽어야할지 고민됐고, 읽다가 문맥을 놓쳐 다시 되돌아 읽기를 반복했다. 또 그 판결은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처음 보는 용어와 생소한 표현 때문에 마치 영문을 읽을 때처럼 용어를 찾아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나서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마도 그 시절 필자가 법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법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 시절 필자가 곧 법원에 문을 두드리는 평범한 소송당사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소송을 거쳐 판결문을 처음 받아보는 소송당사자들이 판결문을 읽고 나서 드는 느낌 또한 그 시절의 필자와 같지 않을까. 수개월 동안 재판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기만을 기다리던 소송당사자들이 판결문을 받고 나서 그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소송당사자들은 사법부를 심하게 말해 ‘정체불명의 괴문서를 작성하는 집단’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의화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온갖 의학 전문 용어로 대화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그때

화면 하단에는 친절하게 자막을 통해 시청자가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해 주곤 한다. 만일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 자막과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의사들끼리 쓰는 전문 용어로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설명해 준다면 환자는 그 의사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소통이다. 법원 역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 판결문 작성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들이 타성에 젖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렵기만 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면 소송당사자들 역시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작성할 때도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근래에는 판사들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굳이 판결서개선위원회의 활동과 그 성과물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판사 개개인들이 호흡이 긴 문장은 끊어 쓰고, 한자 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가급적 우리말로 표현하려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법률 자체가 어려운 용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낯선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판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叔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체부 2200-621 제 육 부 2200-697 체 육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프 로 젝 팀 2200-55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